경제·산업현안

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48

Ⅱ.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특징····· 54

Ⅲ. 최근 금리와 주택가격간 연계성 ····· 59

Ⅳ.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시사점 ····· 64

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황종률** 경제분석관(788-4659)

1.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정부는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 지난 12. 20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4(경제상황돌파 + 4대 정책방향)의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

(경제상황돌파) 투자활성화, 국내소비 진작, 수출회복 지원 등을 통해 경기반등의 모멘텀 마련

■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활성화**

- 민간투자 25조원, 민자투자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
- 최저 1%대 금리의 4조 5천억 원 규모 설비투자 촉진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

* 민간투자는 기업투자, 민자투자는 SOC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투자는 공공기관의 SOC 투자

**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6개월 추자 연장 등임

■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

- 대규모 쇼핑행사 활성화,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유치 노력 강화, 국내여행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진작

■ **국민 생활·안정 위한 건설투자 확대**

- SOC 23.2조원 투자,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 지원

■ **수출회복 지원 및 적극적 대외진출**

- 13대 주력 수출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

* 13대 주력 수출품목: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선박, 무선통신기기, 섬유, 플라스틱제품, 바이오헬스
* 3대 시장: 주력시장(미,중,일, EU), 전략시장(신남방·신북방), 신흥시장 등임
  -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펀드 해외진출을 위한 1천억 원 신규 조성 등으로 관련 분야수출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신남방정책의 고도화, 신북방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등 대외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

■ **지역혁신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부동산, 가계부채, 외환·금융, 통상, 기업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대응

(혁신동력강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잠재 성장경로 자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동력 강화

■ **DNA 확산 및 제2의 반도체 육성**

-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하여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Data, Network, AI 등 소위 DNA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소위 신산업 BIG3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하여 데이터경제를 2020년까지 본격 확산하고, 선제적인 5G 투자 및 AI산업 육성

■ **주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조기 확보**

- 주력산업의 경우 금년에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토대로 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융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실행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개발에 대하여 3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 범정부 서비스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중장기 혁신전략 마련

■ **밴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

-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수* 20개를 목표로 하여, 스케일업 펀드 3조2천억 원 규모 조성, 예비유니콘기업 특별보증 2천억원 지원 등 스케일업(고성장 벤처기업) 중심의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함

■ **혁신금융 역할 강화**

- 혁신분야의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금년보다 43조원 늘려 479조원까지 대폭 확충하고, 기업 여신심사체계도 전면 혁신하여 모험자본 공급 확대

(경제체질개선)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성과를 창출

■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규제샌드박스* 사례 200건 이상 추가 창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 도입
-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사업에 대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모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

**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로 "신산업출현 → 의견수렴 및 갈등요소 명확화 → 사회적 타협 → 합의도출" 프로세스로 진행

■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 정부 등 분야별 구조혁신**

(포용기반확충)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 강화

■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1/4분기 중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

■ **포용 사각지대 지속적 해소**

-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최소지급액 인상, 74만개의 노인 일자리 지원,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을 통해 포용성 강화

■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 서민 필수생계비 경감, 저소득층 대상 햇살론 5천억 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소득기반 확충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영세 소상공인 25만명에 대한 특례보증 5조원추가 공급, 소상공인 특별 금리대출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미래선제대응) 가속화되는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본격화

■ **인구·가구 구조변화 대응 본격화**

- 1인가구 본격화(10가구 중 3가구)에 대응하여 2020년 상반기 중 종합적인 솔로이코노미 대응 전략 마련
- 주거·출산·보육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지원과 함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노력 강화

■ **국민 삶의 질 제고 노력 강화**

- 내년 상반기 중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수립

■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 온실가스 감축 목표('17년 대비 2.5% 감축) 달성을 위한 이행 점검 및 평가 체계 구축

■ **남북경협 준비**

-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에 선제적 준비

2. 정부의 2020년 경제전망

(실질 GDP) 연간 2.4% 성장 전망

■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및 투자 등 내수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개선 흐름 예상**

- IMF세계경제 전망('19→'20년): 세계경제성장률 3.0→3.4, 교역신장률 1.1→3.2

(경상 GDP) 연간 3.4% 성장 전망

■ 실질성장률 개선과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확대되면서 '19년 1.2%에서 '20년 3.4%로 상승할 전망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19→'20년): -0.8→1.0%

(취업자수) 연간 25만명 내외 증가 예상

■ 노동수요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감소 영향으로 '19년(28만명)보다 소폭 축소된 25만명 내외 예상

- 고용률(15~64세)은 66.8%에서 67.1%로 상승 전망, 실업률은 3.8%에서 3.7%로 하락 전망

(소비자물가) 연간 1.0% 상승 전망

■ 수요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면의 하방압력 완화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19→'20년): 0.4→1.0%

(수출입과 경상수지) 수출은 연간 3.0% 증가, 경상수지 595억달러 흑자 전망

■ 세계경제 교역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통관수출은 증가할 전망

- 통관수출 증가율('19→'20년): -10.6→3.0%

■ 경상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폭은 '19년에 비해 확대될 전망

- 경상수지 흑자규모('19→'20년): 580→595억 달러

[표 1]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의 2020년 주요 거시변수 전망치 비교

(단위: 만명)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실질GDP성장률	2.3	2.4
경상GDP성장률	3.5	3.4
소비자물가	1.3	1.0
통관수출	2.5	3.0
경상수지(억달러)	546	595
취업자수 증감(만명)	23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9), 기획재정부(2019. 12)

3.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기본 틀에서 지난해와 같으나 경기둔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한 정책 등에서 전년도와 차별화됨

■ 2020년의 1+4(경제상황돌파 + 4대 정책방향)은 2019년의 4대 정책 방향(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과 기본 틀에서 대동소이

- 2019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목표(2.6~2.7%)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강화
-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IT부문 생산차질 위험을 경험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절감

정부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는 주요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하회하는 수준

■ 최근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조짐인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내수활성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달성도 가능할 전망

■ 다만 중기적인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5~2.6%*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은행은 2019~2020년 중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각각 2.5%, 2.5~2.6% 수준으로 추정

Ⅱ.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특징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권일** 경제분석관(788-4677)

1.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1] 주요 내용

가. 가구의 자산, 부채

(자산) 가구의 자산은 금융자산(=저축액+전월세보증금)이 전년대비 2.2%, 실물자산(=부동산+기타실물자산)이 2.9% 각각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7% 증가

- 2019년 가구의 자산 중에서 거주주택의 증가율(6.2%)이 가장 큰데, 특히 소득 5분위의 거주주택 자산증가율(9.4%)이 다른 분위에 비해 큼
  - 거주주택은 1분위 -1.2%, 2분위 5.3%, 3분위 2.9%, 4분위 6.4% 증가

- (자산 구성) 가구의 자산은 금융자산 24.5%, 실물자산 75.5%로 구성되고, 특히 실물자산 중 거주주택의 구성비(41.5%)가 가장 높음

- (소득 5분위별)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분위 가구 평균 자산의 7.2배 수준

[표 2] 소득 5분위 및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구성비

(단위: 만원, %)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거주주택	거주주택외[2]	기타
2018년[1]	42,036	10,346	7,685	2,662	31,689	29,380	16,894	12,487	2,309
2019년[1]	43,191	10,570	7,873	2,697	32,621	30,379	17,933	12,446	2,242
(증가율)	(2.7)	(2.2)	(2.5)	(1.3)	(2.9)	(3.4)	(6.2)	(-0.3)	(-2.9)
(구성비)	(100.0)	(24.5)	(18.2)	(6.2)	(75.5)	(70.3)	(41.5)	(28.8)	(5.2)
1분위	13,146	3,019	1,946	1,074	10,126	9,874	6,755	3,119	252
(증가율)	(-2.8)	(-1.9)	(1.2)	(-7.0)	(-3.1)	(-2.9)	(-1.2)	(-6.4)	(7.4)
5분위	94,663	23,692	19,059	4,634	70,971	65,961	35,108	30,853	5,009
(증가율)	(3.5)	(2.8)	(4.6)	(-4.0)	(3.7)	(4.3)	(9.4)	(-0.9)	(-3.9)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2) 거주주택 외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며, 2012년 가계금융조사(2010년~2011년)에 복지부문을 추가하여 1차 패널조사 실시 후, 2015년 연동표본(매년 표본의 20%가 교체되어, 5년을 주기로 전체 표본이 바뀌는 것을 의미) 도입 등을 거쳐 2019년 8차 표본조사 실시(응답 가구수 18,406가구)

(부채) 가구당 부채(금융부채+임대보증금)는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는데, 분위별로는 4분위 가구, 연령별로는 40대 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순으로 증가

■ (소득 5분위별) 부채는 소득 4, 5분위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각각 8.0%, 3.3%)하였는데, 특히 구성비가 가장 큰 담보대출에서 다른 분위는 감소한 반면 4, 5분위는 각각 10.3%, 4.9% 증가

- 담보대출증가율은 1분위 -9.5%, 2분위 -3.8%, 3분위 -0.6%

■ (가구주 특성별)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 가구의 평균부채가 전년대비 5.7% 증가하여 1억 689만원으로 가장 많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4.9%), 자영업자(3.8%) 순으로 평균부채가 크게 증가

[표 3] 부채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구성비

(단위: 만원, %)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기타[2]	
2018년[1]	7,668	5,539	4,407	776	58	298	2,129
2019년[1]	7,910	5,755	4,583	786	58	328	2,155
(증가율)	(3.2)	(3.9)	(4.0)	(1.2)	(-0.2)	(10.2)	(1.2)
(구성비)	(100.0)	(72.8)	(57.9)	(9.9)	(0.7)	(4.1)	(27.2)
1분위	1,610	986	657	175	52	103	624
(증가율)	(-0.2)	(-3.6)	(-9.5)	(31.9)	(17.5)	(-14.9)	(5.8)
4분위	9,838	7,578	6,120	983	65	410	2,260
(증가율)	(8.0)	(9.4)	(10.3)	(-0.1)	(21.4)	(20.2)	(3.5)
5분위	17,712	12,542	10,270	1,761	38	472	5,170
(증가율)	(3.3)	(4.3)	(4.9)	(2.3)	(-12.7)	(-0.8)	(1.0)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2)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곗탄후 불입금액, 빌린 돈(개인, 직장)
자료: 통계청, 2018년 및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나. 가구소득 및 소득분배

(가구소득) 2018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전년(5,705만원)대비 2.1% 증가한 5,828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으로 2017년(4,671만원)대비 1.2%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2.1%p)

■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기타(무직 등) 5.7%, 상용근로자 3.8% 순으로 증가

[표 4]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단위: 만원)

	소득 (A)	비소비지출 (B)	처분가능소득 (A-B)
2017년[1] (증감률)	5,705 (4.1)	1,034 (8.2)	4,671 (3.3)
2018년[1] (증감률)	5,828 (2.1)	1,098 (6.2)	4,729 (1.2)

주: 1) 소득, 지출은 발생연도 기준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표 5] 종사상지위별 소득

(단위: 만원)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무직 등)
평균	2017년	5,705	7,439	3,502	6,361	2,728
	2018년 (증감률)	5,828 (2.1)	7,719 (3.8)	3,565 (1.8)	6,375 (0.2)	2,884 (5.7)

주: 1) 소득, 지출은 발생연도 기준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소득분위별) 소득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전년대비 4.4%로 다른 소득분위(2분위 2.6%, 3분위 2.5%, 4분위 2.2%, 5분위 1.7%)에 비해 가장 높게 증가

■ (소득 원천별) 근로소득은 3,781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1,17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3% 감소

[표 6] 소득 구성 항목 및 소득분위별 소득

(단위: 만원)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017년[1]	5,705	3,640	1,243	380	351	91
2018년[1] (증가율) (구성비)	5,828 (2.1) (100.0)	3,781 (3.9) (64.9)	1,177 (-5.3) (20.2)	380 (0.2) (6.5)	387 (10.1) (6.6)	102 (12.1) (1.8)
1분위	1,104	302	100	85	438	180
2분위	2,725	1,468	513	170	423	151
3분위	4,577	2,775	1,081	230	409	81
4분위	6,977	4,711	1,513	336	352	64
5분위	13,754	9,648	2,679	1,081	310	36

주: 1) 소득 발생연도 기준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분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2] 등에 따라 지니계수[3], 5분위 배율[4], 상대적빈곤율[5] 등 주요 분배지표 모두 전년대비 개선

■ 2018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 5분위배율은 6.54, 상대적빈곤율은 16.7로 전년대비 모두 감소(각각 -0.009, -0.42, -0.6)

[표 7] 소득분배지표 및 개선효과

	2017년			2018년		
	시장소득 (A)	처분가능소득 (B)	개선효과 (A-B)	시장소득 (A)	처분가능소득 (B)	개선효과 (A-B)
지니계수	0.406	0.354	0.052	0.402	0.345	0.057
5분위배율	11.27	6.96	4.31	11.15	6.54	4.61
상대적빈곤율	19.7	17.3	2.4	19.9	16.7	3.2

주: 1) 시장소득 기준에 비해 조세, 사회보험, 이전지출 등에 대한 누진율 적용 등이 소득분배를 개선한 효과를 보여 줌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 특징

(자산 및 부채) 2019년 가구의 자산은 소득 4, 5분위에서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가구의 부채는 소득 4, 5분위에서 담보대출 위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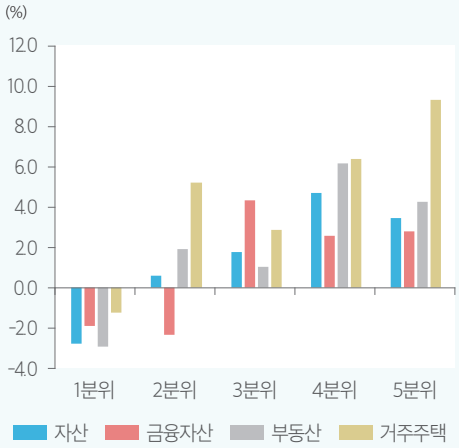
■ 소득 1분위의 거주주택은 1.2% 감소한 반면, 4, 5분위는 각각 6.4%, 9.4% 증가

■ 소득 1분위의 담보대출은 9.5% 감소한 반면, 4, 5분위는 각각 10.3%, 4.9% 증가

■ (재무건전성) 2019년 가구의 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둔화(각각 -4.8%p, -2.9%p)되어, 자산대비 부채 비중(0.1%p),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1.2%p)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3.2%p) 비중이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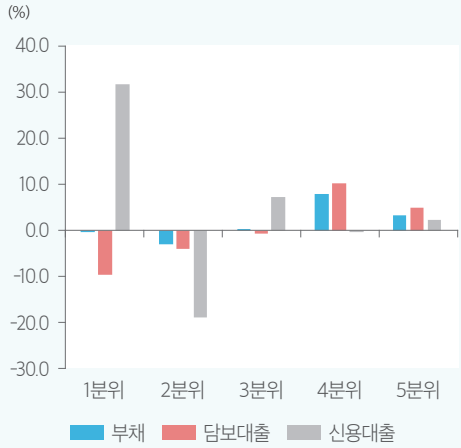
2) 기초연금 인상(20→25만원), 장애인연금 인상(20.6→25만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3)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 0, 완전불평등한 경우 1
4) 균등화 개인소득 순서에 따라 전체 인구를 5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높은 5분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평균소득과 소득이 낮은 1분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평균소득 사이의 비율로,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냄
5)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며,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

[그림 1] 소득분위별 자산항목별 증가율 비교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실시년도 3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그림 2] 소득분위별 부채항목별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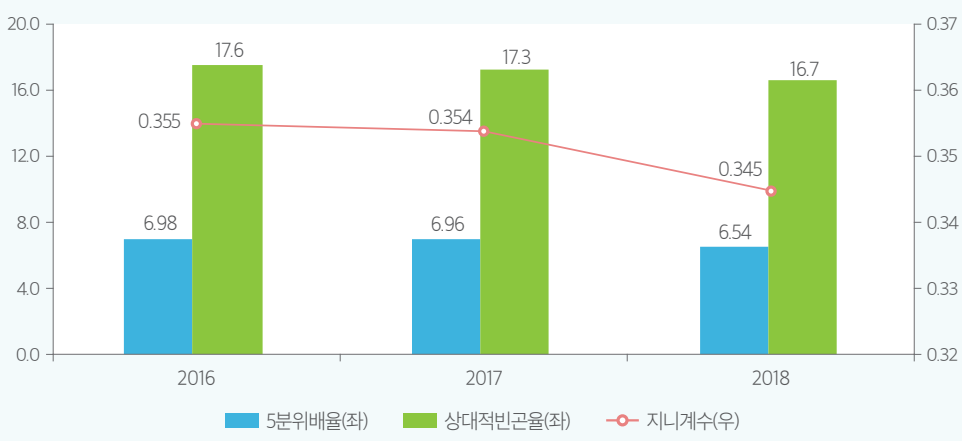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실시년도 3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분배) 근로소득, 이전소득의 증가 등으로 2018년에 소득분배지표 개선

■ 2016~2018년 기간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에서 0.345로 0.010, 5분위배율은 6.98에서 6.54로 0.44, 상대적빈곤율은 17.6에서 16.7로 0.9 감소 등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그림 3] 소득분배지표 개선 추이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III. 최근 금리와 주택가격간 연계성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박승호** 경제분석관(788-4671)

가. 금리 및 주택시장 동향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는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 하락세 지속

■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미국 등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16년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2018년말 이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전반적 하락세**

- 우리나라 국채 금리와 미 기준금리 간에 전반적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채(10년) 금리는 2012년초 3.8%에서 2019년 12월 1.7%로 하락

■ **한편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경기여건 등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인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25%에서 2016년 6월 1.25%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 11월 1.75%까지 상승한 이후 최근 두 차례 하락하며 2020년 1월 기준 1.25%

2012~2013년 전반적 조정 양상을 보였던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2014년 이후 상승세

■ **우리나라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12년~2013년 1.3%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전반적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말 기준 2012년초 대비 13% 상승**

■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12~2013년 각각 6.2%, 5.6%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2~2019년 기간 각각 29%, 1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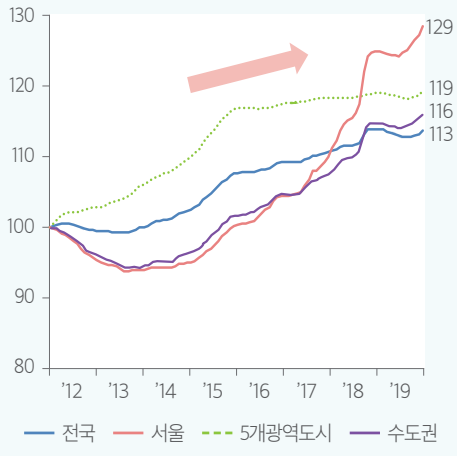
- 한편 5개 광역시[6] 아파트 가격은 2012~2019년 중 19%의 오름세를 보이며 기간 중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6) 5개 광역시는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를 의미하며 수도권인 인천 제외

[그림 4]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5] 주요 권역별 주택가격 추이



주 : 주택가격은 2012년 값을 100으로 조정
자료: KB국민은행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으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

-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중금리가 일정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나. 금리와 주택시장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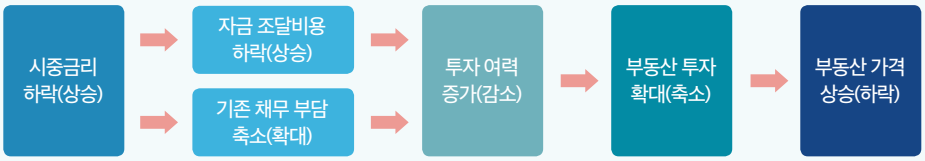
시중금리는 부동산 투자 관련 자본조달비용, 기존 채무부담, 투자수익의 현재가치를 변화시켜 부동산 가격에 영향

- 금리가 하락할 경우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으로 투자유인이 확대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 반면 금리 상승은 부동산 투자금의 조달비용을 상승시키고 기존 채무부담을 확대해 부동산 구입 유인을 억제

■ 또한 금리 하락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를 상승시켜 부동산 투자 유인을 확대 시키는 효과

- 금리 하락은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율을 낮춰 투자유인을 강화

[그림 6] 금리와 주택가격간 연계 Flow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금리와 주택가격간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

■ Lastrapes(2002)는 양(+)의 통화공급 충격(금리 인하 등)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 이영수(2008)는 금리상승시 주택 가격이 19개월에 걸쳐 하락한다고 분석하였으며 박송춘(2009)도 금리와 부동산가격간 음(-)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

■ 금리와 부동산 가격간 유의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문들도 존재

- 김윤영(2012)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못한 반면,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은 유의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
- 한편 전해정(2014)은 CD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택가격과 음(-)의 관계를 가졌으나, 위기 이후에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

금리와 부동산 가격간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8년(2012~2019년) 기간에 대해 주택가격과 국고채 10년 금리간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

■ 국고채 10년물 변동분과 권역별 아파트 상승률간 상관관계를 분석

- 시차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진행

■ **분석기간은 금융위기(2007~2009년), 유럽재정위기(2010~2011년) 등을 고려하여 설정**

- 2012~2019년 분석결과 금리변동과 주택가격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금리 하락(상승)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락)함을 나타냄

■ **2012년~2019년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전국 아파트가격과 국고채 10년 금리간 상관계수[7]는 -0.31이며 서울, 광역시, 수도권 상관계수도 음(-)의 관계가 시현**

- 동기간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 아파트가격과 금리간 상관계수는 각각 -0.03, -0.34, -0.12

■ **2012~2015년, 2016~2019년 두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도 시중금리와 아파트 가격간에 전반적으로 음(-)의 관계가 나타나며, 상관계수의 크기는 상이**

- 전국 아파트의 경우 2012~2015년, 2016~2019년 모두 음(-)관계가 나타나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하락해 금리와 아파트가격간 연계성 약화를 시사
-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금리와 음(-)의 관계가 나타나며 2012~2015년 대비 2016~2019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상승
- 5개 광역시의 경우 금리와 아파트가격간에 2012~2015년 음(-)의 관계에서 2016~2019년 양(+)의 관계로 전환되는데, 이는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5개 광역시 아파트가격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세를 보인 데 기인할 가능성

[표 8] 시장금리와 주택가격간 상관계수

	분석기간		
	2012~ 2019년	2012~2015년	2016~2019년
국채10년vs.전국 아파트	-0.313	-0.319	-0.168
국채10년vs.서울 아파트	-0.031	-0.193	-0.492
국채10년vs.5개 광역시 아파트	-0.339	-0.252	0.507
국채10년vs.수도권 아파트	-0.121	-0.259	-0.382

7) 상관계수는 -1 ~ 1의 값으로 0 값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고,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양(+)의 방향인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값이 증가하면 다른 하나의 변수값이 증가하는 관계이며 음(-)의 방향인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값이 증가하면 다른 하나의 변수값이 감소하는 관계

다. 결론

최근 금리의 하락세 및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금리와 주택가격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금리와 주택가격간 전반적으로 음(-)의 관계가 나타남

- 2012~2019년 기간에 대해 전국,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금리와 주택가격간 음(-)의 관계 시현

- 이는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주택가격이 하락(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

기준금리 인하기조 등으로 시중금리의 하락 압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택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저금리에 기인한 주택투자 확대가 소비 등 거시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또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 주택정책 입안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정책과 시중금리의 방향성 등을 고려할 필요

Ⅳ.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시사점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상미** 경제분석관(788-4752)

1.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7일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인력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 부족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해당 전망은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국가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었으며, 2019년 6차 전망을 실시함**

-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 인력수급 동향과 전망을 조사하고 자료를 작성·공표

■ **인력공급(노동력) 및 인력수요(취업자) 예측을 바탕으로 신규인력 수급차를 전망**

- 2019년도 발표 자료의 특징은 산업별(소분류 228개), 직업별(세분류 270개) 세부전망을 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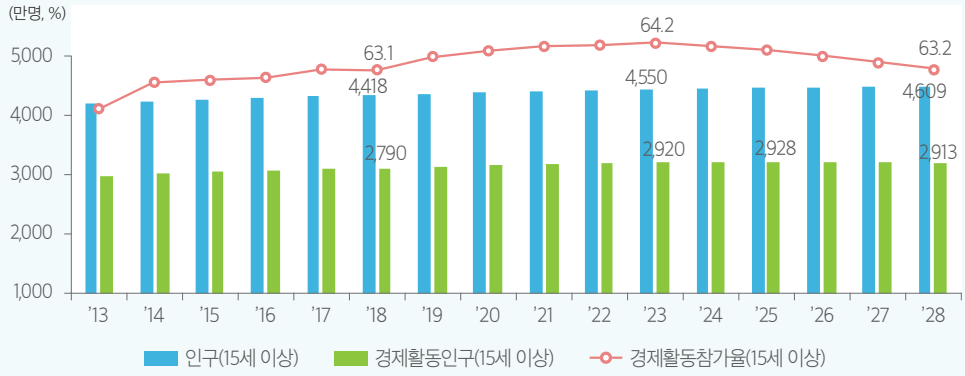
(인력공급) 정부는 2018~2028 기간 동안 1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8]를 이용)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은퇴시기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증가하다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26년부터 감소**

-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58년 이전 출생자들이 65세로 편입되는 2023년을 정점(64.2%)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8)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이 제외됨

[그림7]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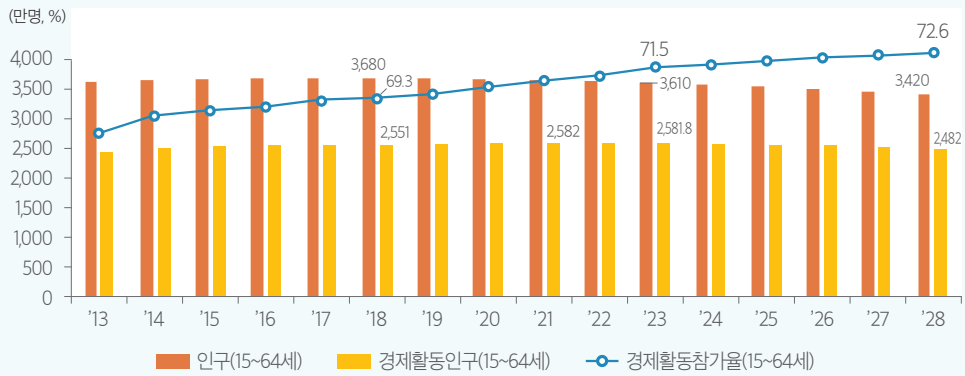


주: 1) 2013~2018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며, 이후는 고용노동부의 전망치
2) 경제활동참가율은 만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 15~64세 인구는 감소하여 15~64세 경제활동인구도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되고 감소폭도 지속적으로 확대

- 2021년까지는 은퇴시기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나, 15~64세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22년부터는 15~64세 경제활동인구도 감소세로 전환
-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고학력화와 여성 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8] 15~64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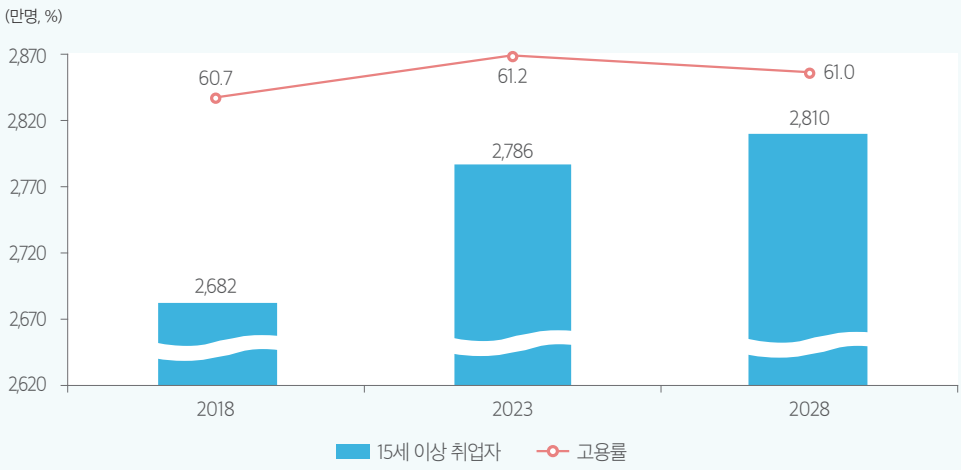
주: 1) 2013~2018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며, 이후는 고용노동부의 전망치
2) 경제활동참가율은 15~64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인력수요) 정부는 2028년 15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대비 128만명 증가하나, 202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9)]

■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8년 2,682만명에서 2028년 2,810만명으로 128만명 증가하며, 고용률은 2018년 60.7%에서 2028년 61.0%로 0.3%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노인인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7년부터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감소

[그림 9] 15세 이상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주: 고용률은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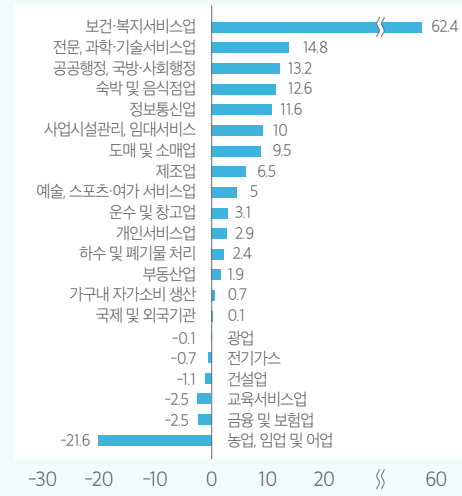
■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62만명), 직업별(대분류)로는 전문가(63만명)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전망
- 또한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숙련수준이 높은 전문가 취업자가 증가할 전망

9) 인력수요를 경제성장에 따른 파생수요로 보아, 경제성장전망과 취업계수 전망을 반영하여 도출하는 인력요건법 이용

[그림 10]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취업자) 증감 전망(2018~2028년)

(단위: 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신규인력 수급차) 정부는 향후 10년간 인구감소로 신규인력 공급이 크게 줄면서 신규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신규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향후 10년간의 신규인력 수요는 718만명이나, 신규 인력공급은 679만명으로 전망되어 약 39만명의 신규인력 부족이 예상

- 학력별로는 고졸자(60만명)와 대졸자(45만명)에서 초과 수요인 반면, 전문대는 (64만명) 초과 공급이 예상됨

[표 9]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단위: 만명)

구분	전체	고졸	전문대	대학	대학원
신규 인력공급(A)	679.4	138.7	154	307	79.7
구인 인력수요(B)	717.9	198.7	89.8	352.2	77.2
차이(A-B)	-38.5	-59.9	64.2	-45.2	2.5

주: 1) 공급: 노동시장 신규진입 인구(졸업생+단기실업자)/장기실업자 제외
2) 수요: 생산증대에 따른 성장수요 + 기존인력 유출(이직, 퇴직, 사망 등) 에 따른 대체수요
자료: 고용노동부

2. 시사점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 교육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

■ **산업별 인력수요(취업자) 전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향후 10년간 농업·어업·임업 분야의 취업자가 약 21만명,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숙련직이 약 18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농업·어업·임업 분야 노동자들의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예상됨

■ **해당 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직업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과 고용서비스망 확대가 필요**